

한국전쟁시 일본의 후방지원

李 鍾 判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연구관)

- 역자서언
- 일본의 후방지원
- 한국전쟁과 일본자립의 길
- 소해대 활동
- 소련의 '팽창'과 미국의 '봉쇄'

1. 역자서언

여기에 옮긴 글은 일본에서 발간된 『朝鮮戰爭(下):1999년 발행, 學研』에서 한국전쟁 당시 일본의 후방지원분야를 발췌한 것이다. 이 책은 上·下로 출간되었으며, 사진과 도표를 적절히 사용하여 전문가들의 고견을 모아서 편집한 책이다.

이 책이 나온 시기와 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유추해 볼 수 있다. 일본 국내에서는 탈냉전에 따라 적대관계 국가가 사라진 후 자위대의 역할 축소와 미일동맹 해체논쟁이 확산되는 가운데, 일본주변에서는 1994년 북한의

핵위기, 1996년 대만 총통선거전 중국의 대만근해에서 미사일 발사훈련과 관련된 중국위협론 대두, 1998년 일본상공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 1999년 노도반도에서 북한선박으로 추정되는 괴선박 출현 등 일련의 주변 사태를 일본의 안보위협으로 판단하여 미일동맹을 강화시키면서 자위대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주변사태안확보법’(1999년 5월 24일 국회통과)을 제정하였는데, 주변사태의 핵심대상은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한 것이다.

이러한 한반도 유사시의 기점이 되는 1950년의 한국전쟁을 부각하여, 그 당시 동북아 정세, 미국의 극동전략 및 미국이 일본을 활용해야 했던 배경, 일본의 후방지원과 전쟁특수에 의한 경제기반구축, 일본의 재군비 과정을 강조하면서, 차후 제2의 한국전쟁이 일어나도 미일동맹의 역할과 일본의 후방지원 역할은 지대할 것임을 이 책을 통하여 시사하고 있다.

여기에 편역하여 옮긴 내용은 일본과 관련되는 부분만 발췌한 것이다.

2. ‘일본의 후방지원’에서는 전방지원도 할 뻔했는데 후방지원에 머물렀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미군 점령기간 중이었던 일본은 병력 및 물자수송, 병기 및 군수품수리·생산, 기지제공, 병사휴양, 부상병 치료 등 다양한 후방지원을 했고, 17번째 참전국으로 군대과견도 검토되었다는 점과 일본이 보복공격을 당할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3. ‘일본자립의 길’에서는 한국전쟁이 전후 일본의 방향을 결정해 준 사건으로 평가, 국제정치면에서 일본의 중립을 불가능하게 했고, 냉전구조속에서 미국진영으로 편입케 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4. ‘소해대 활동’에서는 일본인의 參戰을 강조, 전후 일본의 소해대가 미해군의 요청으로 한국전쟁에 투입된 경위와 소해대 활동, 이 활동이 오늘날 일본해상자위대의 中核이 된 점을 논하면서 제2의 한국전쟁이 일어나도 미국은 일본에게 소해활동을 요구할 것을 시사되기도 한다.

5. ‘소련의 팽창과 미국의 봉쇄’에서는 한국전쟁이 새로운 전쟁을 태동시켰으며, 미·소를 중심으로 냉전을 고착하는 계기가 되었다. 소련은 공산권의 확대를 추진하였고, 미국은 이를 봉쇄함으로써 군비증강과 자유진영의

협력을 추진한다. 또한 한국전쟁은 미소간의 군비확장경쟁의 방아쇠가 되었고, 소련의 확장정책과 미국의 봉쇄정책과의 알력, 냉전구조의 격화를 초래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 장에서는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세계정책의 변화과정과, 그 가운데 미국의 극동정책을 일괄하고 있다. 미국의 極東戰區에 위치한 중요한 지역은 한국과 일본이다. 한국전쟁을 연구하는데는 일본의 지정학적인 가치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당시 미 극동전구의 군사전략을 이해하기 위하여 한국전쟁 개전前後의 미 극동 해공군의 배치와 기지를 삼입했다.

전사는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방향성(vector)을 제시하는 기준이 된다. 미국은 작전을 하면서 분쟁지역 인접국가를 군사력의 발진기지 또는 후방기지로 활용한다. 월남전에서는 필리핀, 걸프전에서는 사우디, 코소보작전에서는 이탈리아를 활용했으며, 최근의 아프가니스탄의 테러전쟁에서는 인접국인 파키스탄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한국전쟁당시에는 미국은 일본을 활용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글을 편역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역자의 설명을 각주로서 첨언하였다.

2. 일본의 후방지원¹⁾

(1) 오키나와 기지를 사용하면 소련도 제압가능

미국은 북한이 38선을 넘어 한국을 공격했다는 보고를 접수하고 미 고위

1) 역자주: 후방지원에서 '후방'은 군수(logistics)를 의미한다. 「국방관계용어집, 방위연구소(1972년)」. 즉 후방지원의 의미는 군수지원 또는 전투군무지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의 신미일 가이드라인(1997년 9월 23일)에서 후방지역의 개념을 “일본영역 및 현재 전투행위가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그곳에서 실시하는 기간중 전투행위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일본주변의 공해 및 그 상공”으로 규정하고 있다. 1950년 당시는 이 범위를 초월하여 후방지원활동을 했다.

층에서 사태판단을 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이 교환되었다. 지금은 그 당시의 메모나 의사록이 공개되고 있다.

트루먼은 “한국을 극동의 그리스”라면서 긴급대응을 요구했다. 이 공격은 북한이 “총력전으로 한국을 제압하기 위한 공격”이라는게 미 고위층의 공식적인 인식이었다. 아울러 소련의 참전 가능성이 논의되었고, 핵전쟁으로의 확대 가능성도 논의되었다.

그러나 미 본토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의구심은 갖지 않았다. 왜냐하면 소련 극동군의 핵공격기지를 파괴할 수 있는 미국의 공군 출격기지가 오키나와에 있었으며, 만약 핵공격이 시작된다해도 피해는 오키나와와 일본 본토에 머물 것이고 미국본토까지는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게 미 고위층의 예측이었기 때문이다.

말 할 나위없이 주일미군기지는 미군과 그 가족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최적지였다. 미국은 이와 같은 관계와 상황을 지난 5년간 점령정책을 통하여 만들었던 것이다.

트루먼 대통령을 비롯한 미 고위층은 한국전쟁에 대응책을 논의하면서, 미국에 있어 일본이 어떠한 전략적 의미가 있으며 어떠한 미군이 배치되어 있는지 숙지하고 있었다.

미국은 북한침략이라는 보고를 받고도 패배감을 갖지 않았던 것은 일본(본토 및 오키나와)이라는 전방기지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어, 전투가 미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전쟁을 종결지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예를 들면 1950년 6월 25일 회의에서 존슨 국방장관은 소련이 북한과 연합하여 참전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대응책을 논의하는 가운데 오키나와 및 그 남쪽의 3개섬을 수일내 공군(핵무장한 극동소련공군을 파괴하기 위해)의 출격기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발언했을 정도였다.²⁾

2) 역자주: 오키나와의 전략적 중요성은, 제2차 세계대전 간에 일본에게는 남서군도를 장악하기 위한 전진기지였고, 미국에게는 일본본토 공략을 위한 발판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소련이 직접 한국전에 개입하지는 않았으나 만약 개입했었다면 오키나와를 비롯한 류큐열도는 처음부터 미소간의 핵전장이 되어 1945년의 참상이 후 또 한번의 참화를 겪어야 했을 것이다.

(2) 일본은 주한 미국인의 긴급대피지역

미국은 주한 미대사 류초로부터 보고를 받고,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에 대한 긴급대피작전을 실시하였다. 이 작전은 류초대사의 지도에 의해서 진행되었고 맥아더가 미 극동군사령관 자격으로 군사작전을 지휘했다.

최초 대피할 대상은 부녀자 600명으로 프리킷 2척에 탑승하여, 큐슈(九州)의 사세보(佐世保)와 오쿠라(小倉)로 대피시켰다. 미 전투기와 구축함이 이를 호위했다. 이것이 한국전쟁에서 맥아더가 실시한 최초의 작전이었다.

또한 전쟁초기 미국은 소련에게 참전구실을 주지 않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했는데, 북한군 공격시 공군조종사를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대체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 첫 시도로 이다츠케(板付)기지에 한국조종사 10명을 김포 공항을 경유하여 소집, 북한 전차부대를 공격하도록 했다. 기지가 일본의 출입국관리법 등이 전혀 미치지 않았던 치외법권지역이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3) 병력·물자수송은 처음부터 일본이 담당

개전초기 한국군만으로 북한의 공격을 막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았던 한

후에는 일본열도-오키나와-필리핀을 연결하는 鳥嶼線은 소련 및 중공의 남진을 봉쇄하는 핵심기지였다. 또한 오키나와는 특히 미국의 해공군 관점에서 보면 서해와 동해를 통제하고, 소련의 남진출구를 봉쇄할 수 있는 해군 최적의 작전기지이며, 공군의 관점에서도 중국대륙까지 500마일, 동경 및 마닐라까지 825마일, 서울까지 635마일로 후방지원 및 항공작전의 기반이 되는 기지다. 미국은 대일강화조약 후에도 1972년까지 오키나와를 통치하면서 냉전전략의 거점으로 활용했다.

국정부는 미국에 무기와 탄약을 수송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의 요청을 받은 트루먼 정권은 6월 27일 맥아더에게 일본에 비축하고 있는 군수물자 중에서 미군의 긴급물자만 제외하고 모두 한국에 지원하도록 명령했다.

이 명령을 접수한 GHQ³⁾는 예하조직인 일본상선관리국에서 군수품 수송을 담당하도록 했다. 일본상선관리국의 선박관리는 일본정부 예하조직인 상선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실시하고 있었는데, 상선관리위원회는 본래 1942년 전시 해운관리청에 설치하여 처음부터 군수송업무를 부여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었다. 이 조직이 다시 한국전쟁에서 군수지원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동원된 선박은 개전직후 불과 몇 개월만에 69척, 총 34만톤에 이르렀으며 침체했던 해운업계가 다시 활기를 찾게 되었다.

그 당시 상선관리위원회 이사장을 역임했던 아리요시(有吉義弥)는 『점령하의 일본해운』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이 시기 대부분의 선박은 전차를 수송할 수 있는 LST이었으며, 대형 군수자재수송은 물론, 해안 어느 곳이나 상륙이 가능했고, 아울러 일본선원들은 한국연안을 잘 알고 있어 미국에서 투입된 미국선원보다 훨씬 유용했다고 한다.

현재 요코하마에서 영구보존하고 있는 니혼마루(日本丸)도 미국의 지시를 받아 1950년 8월 17일 요코하마에서 부산으로 출발했고, 아울러 그 해에 인천, 제주를 왕복하면서 군인과 피난민을 수송했다. 이것은 당시에 극비 행동이었기 때문에 출항 후에는 무선교신을 일체 금지시키고 선박의 등화관제도 철저히 실시하는 등 보안을 유지했다. 이들 선박들은 교전지역을 운항했기 때문에 일본선주협회의 요구로 미군은 인명, 선박에 대한 안

3) 역사주: GHQ/SCAP(연합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 General Head-Quarter of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의 약자, 간단히 GHQ라 하며, 최고사령관은 맥아더, 최고사령관 자문기구로 미·영·중·소의 4개국 대표로 구성된 대일이사회(Allied Council for Japan)가 있긴 했으나, GHQ가 이미 일본에 대해 점령정책을 시작한 다음 설치되어, 실질적으로는 미국에 의한 단독점령정책이었다. 미국주도의 GHQ에서 일본정부를 간접통치하고 있어 미국 의도대로 일본을 활용할 수 있었다.

전을 보장하고 위험수당을 지급했다. 이러한 보상으로 선주협회는 수송능력을 최대한 가동하여 군수지원활동을 했다.

GHQ는 개전 4일 후인 6월 29일, 군수지원활동에 근무하는 선원단체인 노동조합, 해운조합에 “한국·대만방면에 활동하는 선박에 대하여 스트라이크, 노동쟁의 등 수송업무에 방해되는 활동을 금지하며 위반자는 처벌한다”는 구두명령을 하달했다.

이를 접수한 조합에서는 “무력으로 전투에 스스로 참가할 의무는 없다. 북한에 도움이 되는 제5열과 같은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명령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위험방지, 위험수당지급, 재해수당을 보장하도록 요구했다.

1주일 후인 7월 8일, 상선관리위원회와의 사이에서 조합에서 주장하는 대부분의 요구가 수용되고 협정서가 체결되었다. 그러나 이 협정서를 보면 수당 대상은 각종 위험물 가운데에 화약류 외에도 독가스까지 포함되었다는 것에 전율을 느낄만하다.⁴⁾

또한 이 협정서에도 체결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일본선원에게 발포하고 구타하는 등 폭행사례가 적지 않았으며 부상당하는 선원도 발생했다. 전시이기 때문에 버젓이 통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항만노동조합에서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전쟁이 확대됨에 따라서 노동이 강화되자 이를 감독하는 미군에 의한 구타사건이 계기가 되어 각지에서 무기수송거부 투쟁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군수물자수송의 중심지였던 오오사카, 고베, 요코하마에서 더욱 심했는데, 가혹한 노동, 저임금, 차별, 무기에 의한 협박 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지역단위로 스트라이크를 결의하고 물자적재를 거부하는 운동으로 확대되었다.

4) 역사주: 신미일 가이드라인(1997년 9월 23일)에서 미군에 대한 후방지역지원은 ‘보급, 수송, 정비, 위생, 경비, 통신, 기타활동’으로 구분하여 무기와 탄약의 수송은 전투행위와 관련하여 제외하고 있는데, 1950년 당시는 무기류, 탄약류까지 일본이 수송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운동은 1951년 3월에 시작되어 4월말까지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나, 결국은 임금인상과 노동개선으로 마무리 되었다.

(4) 미군 폭격기 발진기지로서의 일본

미국은 소련의 직접개입을 우려하여 초기에는 강도 높은 작전을 삼가했으나 그것은 기우였으며, 또한 북한의 공격이 한반도내에서 한정될 것으로 보고, 주일미군기지를 전면적으로 활용하여 한국에 대한 공중지원, 수송지원, 군사연습 등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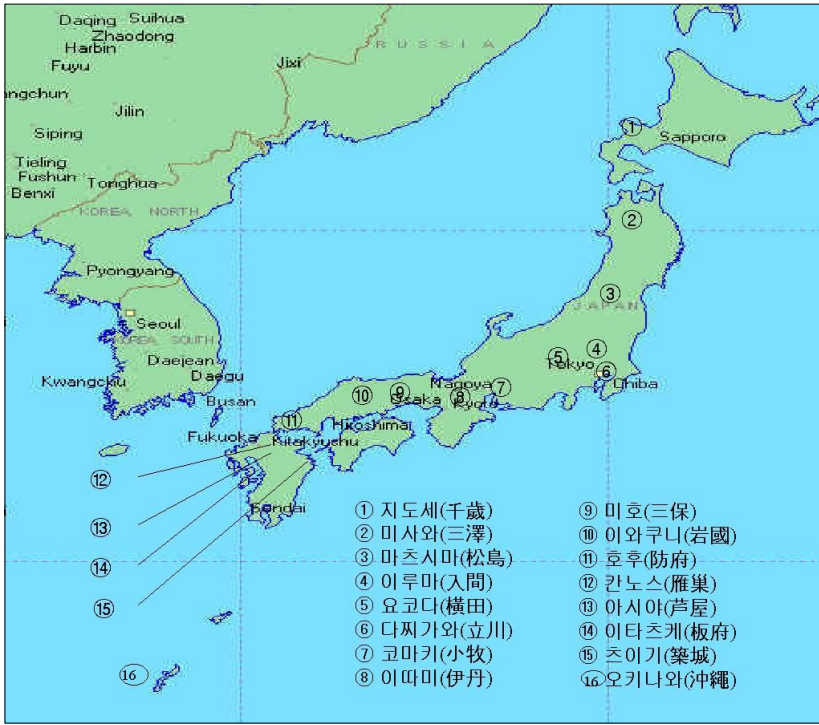
특히 유엔군은 한국전쟁수행을 경찰적 행동이라는 명목으로 수행하면서 한국군과 미군, 유엔군 참전국의 군대훈련까지도 일본에서 실시하였다.

공중공격을 위한 출격기지는 다음 <도 1>에서와 같이 16개소였다. 이 가운데 최대규모의 기지는 오키나와에 위치한 카테나(賀手納)기지로, 여기서 연일 B29폭격기가 발진했다.

또한 일본본토에서 가장 큰 작전기지는 동경 서북쪽에 위치한 다찌가와(立川)기지였는데, 이 기지는 본래 구일본 육군항공대 비행장이었다. 미 군정기간중 B29 등 대형폭격기나 물자, 병력수송용 대형수송기가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전천후기지로 개조되었다.

아울러 이 기지는 요코다(横田), 조후(調布), 이루마(入間), 다마(多摩)탄약기지, 사가미하라(相模原)보급기지와 연동체제를 갖추고 있어, 여기서 공중폭격을 위한 폭격기와 물자보급을 위한 대형수송기가 발진했다. 다마(多摩)탄약기지와 사가미하라(相模原)보급기지에서 트럭으로 다찌가와로 수송하고, 또한 동경 각 지역에서 만든 네이팜탄을 철도로 다찌가와에 집결시켰다.

이것을 탑재한 폭격기가 다찌가와에서 발진했다. 이착륙 소음으로 주민들이 시달린 것은 물론이고 추락사고에 의한 피해와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도 1> 주일미공군기지

1951년 11월 폭탄을 탑재한 B29폭격기가 이륙직후 추락하여 폭탄이 폭발하여 다찌가와시 주택 100여 가구가 큰 피해를 입었다.

다찌가와는 또한 전선으로 떠나는 병사들이나 휴가병의 휴양기지였다. 기지 주변에는 미군을 대상으로 카바레가 즐비하였고 매춘부가 군거하였다. 여기서 미군에 의한 강도, 강간, 가옥불법침입 등이 빈발하였고, 무엇보다도 사회적인 문제가 된 것은 청소년에 대한 영향이 많았다.

초등학교 주변의 민가를 매춘부들이 방을 빌려서 매춘행위를 하고 주야를 막론하고 미군과 매춘부가 농락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았다. 야간에는 초등학교까지 들어가기도 했다.

『다찌가와 교육 100년사』에는, 그 당시 교사들의 하루 일과는 밤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5) 「기지촌」 후쿠오카의 경우

후쿠오카(福岡)에 위치한 아시야(芦屋)은 한국과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도시이다. 전쟁이 확대되면서 전형적인 기지촌이 형성되었다. 무기, 탄약, 병력수송기지로서 이용했던 지역이다.

휴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약 3년 동안에 공수된 병력은 300만명, 부상병은 30만명, 물자가 70만톤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기에 집결된 노동자가 많을 때는 1만명을 넘었다. 그전까지 13개밖에 없었던 음식점이 개전 이후 9개월 동안 여자 있는 음식점이 400개, 카바레 24개가 생겼다.

그때까지 없었던 민박업이 1951년에는 317가구에 이르렀고 신축가옥이 1950년에 289가구, 1951년에는 106가구나 되었으며 건축자재가 품귀현상이 생겼을 정도였다. 이러한 건축붐은 기지가 어느 정도의 위안부를 필요로 했던가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군거하고 있었던 여성들이 절망적인 기분으로 전장에 투입하는 미군들을 위로하고 사기를 올리고 했음을 상상할 수 있다.

이곳에서 가까운 오쿠라(小倉)에서는 개전 이후 한달도 채 안된 7월 11일, 기후(岐埠)에서 훈련을 마치고 군용열차에 승차, 오쿠라에서 한국으로 출항하기로 되어 있었던 미군 160명이 무장한 채로 막사를 탈영한 사건이 발생했다. 마침 오쿠라시에는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 탈영병들의 폭행, 강간, 약탈행위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폭동은 미군 2개 중대를 투입하여 진압되었고 탈영병들은 다음날 한국전선으로 투입되었다. 이 사건은 미군들의 절망감이 어느 정도 심각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6) 전쟁특수로 재가동된 무기 및 군수품 생산

패전후 금지되었던 무기, 군수품 생산이 실제로 재개된 것은 한국전쟁 발발 2개월 후인 1950년 8월이다. 비상사태와 함께 미군특수의 형태로 발주되었는데, 연료탱크, 네이팜탄 탱크, 날개탄, 낙하산 조명탄, 로켓탄 방향장치, 철모, 폭약 등이 우선 그 대상이었다.

아울러 유자철선, 야전식량, 트럭, 짚차용마포, 자동차 수리 등이 추가되었고 1950년의 계약은 329만 달러에 이르렀다.

강화조약이 발효되면서 미국은 무기완제품 발주를 시작하였고 휴전 후에도 소요량을 예상하여 계약은 1952년 5월부터 1957년 6월까지 520억엔(1억 4,400만 달러)이었다.

품목별로 보면 1951년 7월에서 1952년 6월(1952년 미 회계년도)에 4.2인치 박격포 528문, 81밀리 박격포탄 63만발, 4.2인치 박격포탄 36만발, 81밀리 박격포 조명탄 3만2,000발, 발연통 7만발 등을 발주하였고, 그 금액은 약 55억엔에 이르렀다. 익년도(1953년 미 회계년도)에는 각종 유탄, 박격포탄과 3.5인치 로켓탄, 바츨카포, 총검, 대전차지뢰, 57밀리 무반동총, 75밀리 무반동총탄 등을 포함하여 그 금액도 207억엔(5,750만 달러)로 전년대비 4배나 뛰었다.

이러한 무기완제품 외에도 석탄, 목재, 시멘트, 조립식 가옥도 진지전에 대비하여 주문하였고 역무로는 차량수리가 으뜸을 차지했다.

이러한 전쟁특수는 대부분이 과거의 군수산업계에서 주문을 담당했는데 각 기업은 여기에 필요한 설비투자 자금을 개발은행 등 국가자금, 혹은 증자나 사내보유자금으로 충당하였다. 이것은 일반금융기관들이 무기산업에는 많은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제품의 품질관리나 검사방식에 미국은 고도의 수준을 요구했기 때문에 모회사뿐만 아니라 관련회사, 하청업체에 이르기까지 다른 분야의 일본기업에 앞서 미국식 품질관리(QC)를 도입하게 되었다.

미국의 전쟁은 부대의 기계화를 축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전쟁이 확대되면서 대규모의 자동차, 토목건설기계의 수리 및 제조가 불가피했다.

이것들은 후지자동차(자동차, 클레인트랙터), 빅터오토(대형트랙터, 텍카, 수륙양용차 등), 미쓰비시 일본중공업 도쿄제작소, 가와사키제작소(각종 대형차량과 엔진), 쇼와비행기(공군용 각종차량), 사가미공업(클레인 트랙터, 레이더, 불도저), 고마즈제작소(트레라) 등 10개사 12개 공장에서 수주를 받아, 미군의 긴급수요에 응하면서 유력한 달러 획득원이 되었다.

(7) 항공기산업도 한국전쟁을 계기로 부활

미 군정기간중에 해체되었던 항공산업부문이 전쟁특수로 부활되고 전쟁을 지속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미군은 공중공격이 확대되면서 내이팜탄, 낙하산연료용 탱크를 신메이화공업, 후지공업, 신미쓰비시중공업, 가와사키기계 등에 발주했는데, 각 회사는 이에 생산체제를 위하여 알루미늄 합금재료의 제조가공 기술을 갖추었다.

강화조약이 발표된 후인 1952년 7월, 경연락기(세스나) 분해 및 수리가 쇼와 비행기에 발주되었고, 익년 1953년 1월에는 F51전투기 수리가 가와사키항공기에, 동년 6월에는 B29폭격기, C46수송기 수리가 미쓰비시 중공업에, 함재기 수리가 일본비행기에 발주되었다.

그 외에도 비행기 엔진덮개, 계기, 보조기계, 통신기 등 수리가 계속되었다.

또한 다음해인 1954년에는 소련제 미그15에 대항하기 위해 투입된 F86전투기 및 T33연습기 기체와 엔진 분해수리 계약이 신미쓰비시 중공업과 가와사키 항공기에 발주되었다.

이와 같은 항공관계 수리 특수계약이 1953년 미 회계년도에는 559만달러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일본의 공업력 동원 없이는 미군과 유엔군이 장기

적인 공폭작전이나 물자·병력 수송활동을 계속할 수 없었음은 틀림없다.

(8) 부상병 치료에 일본적십자사 간호사 동원

한국전쟁당시 연합군 야전병원으로 사용되었던 곳은 아래와 같이 14개소로서 그중에서 구레(呉)에 위치한 구해군병원은 영연방군 종합병원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한국전쟁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구육군병원을 복구하여 제141유엔군 후송병원으로 사용하였다.

이 병원들은 각국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부상병 치료를 담당했으나 유엔군후송병원에는 큐슈지역의 7개현 일본적십자지부에서 간호사가 파견되었다.

간호사 파견은 1950년 12월부터 시작되었는데, 1952년 6월 2일 중의원후생위원회 질문에 나선 아리노 의원의 발언에 의하면 제1차 54명, 제2차 25명, 제3차 17명의 간호사가 교대로 파견되었고 질문시점에는 63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했다.

<표 1> 주일유엔군 야전병원현황

지 역	병 원	지 역	병 원
삿포르(札幌)	電 通 局	나고야(名古屋)	通 信 局
센다이(仙台)	簡易保險局	교토(京都)	日 赤 病 院
니카타(新潟)	鐵 道 病 院	오오사카(大阪)	日 赤 病 院
동경(東京)	大東亞病院	사카이(堺)	信太山日陸軍兵舎
	簡易保險局	구레(呉)	旧海軍病院
요코하마(横浜)	松 屋	하카다(博多)	簡易保險局
	大島國民學校	사세보(佐世保)	旧海軍病院

전 일본적십자 고문을 지낸 니나가와(蜷川)를 참고인으로 출두시켜 그 사실을 물었는데, “사원들은 찬성하지 않았다, 그것은 사장의 위반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그 뒤에 매일신문 사가현(佐賀縣)판에는 1950년 12월 11일에 사가현 시청회의실에서 16명의 간호사 출발식이 있기 전날, 일본 적십자 부사장으로 부터 “간호사 파견건은 외부에 발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는 암호전문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파견요청은 일본적십자에 의한 전시소집영장과 같은 성격의 전보로서 동원된 간호사에 대해서는 함구령을 내렸던 것이다.

(9) 일본군이 한국전선에 투입될 가능성도 있었다

지금까지는 일본군의 후방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일본 군사력을 갑자기 한국전선에 투입한다고 하는 상상을 초월한 계획이 수면하에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도 지적하고 싶다.

알다시피 경찰예비대원이 1950년 8월 10일에 공포, 정원은 75,000명이었다. 편성과 훈련은 미 군사고문단이 담당했는데, 편성, 훈련시기가 한국전쟁에 중국의용군이 대거 참전하고 유엔군이 철수를 반복하던 때와 맞물린다.

1951년 1월 3일, 미 극동사령부는 경찰예비대를 “한국전쟁의 필요에 합치한다”면서 미 지상군과 같은 4개 사단병력을 증무장시키고, 다시 6개 사단 추가 증설이 시급하며, 이에 따른 예산조치를 해야한다고 합동참모본부에 요청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물론, 마셜 국방장관까지 이 제안을 지지했다는 차원에서 보면, 경찰예비대를 본격적으로 재무장하여 훈련을 시킨 후 한국전쟁에 투입할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⁵⁾

5) 역사주: 미국의 3군병력은 1945년에 1,212만명에서 핵전략 및 공군에 의존, 동원해제로

하마터면 일본은 17번째 유엔참전국이 될 뻔했다. 그러나 3월 1일 미국 무성에서 이 제안을 완강하게 거부했다. 이유는 만약 이렇게 되면 미국의 최우방국마저도 편견을 갖게 될 것이고 대일정책수행에서 미국은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아울러 소련이 일본에 대하여 보복공격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으며 대일 강화조약에 미국에 적극협조 해왔던 영국마저도 이반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다.

합동참모본부는 국무성과의 대립없이 그 제안을 취소하게 되었으나, 이 제안이 나온 직후부터 일본국내에서는 평화4원칙(전면강화, 중립견지, 군사기지지공반대, 재군비반대)을 기준으로 저항운동이 격화되고, 철도, 전노조, 항만 자동차 등 후방지원이나 전쟁특수와 관계가 깊은 노동조합에서는 쟁기대회를 열어, 평화4원칙을 준수하라는 요구가 더 세졌다. 이러한 움직임도 일본투입론에 제동을 거는데 크게 작용했으리라 생각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일본인들의 평화에 대한 열망과 군국주의에 대한 강한 반감을 분석, 일본을 재군비한다해도 일본인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일본을 군사파트너로서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보호국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일본의 전장투입은 피할 수 있었다.

(10) 핵전쟁에 말릴 위험성도 있었다

한국전쟁기간중 미 정부는 적어도 두번은 핵전쟁을 결심했었다.

한번은 1951년 4월 7일 중거리 폭격기에 9개의 원폭을 탑재하여 출동명령을 하달하고 꺾에 대기시킨 것이다. 그러나 이 폭격기는 최종발진기지인

인해 1950년에는 146만명으로 전후 최저수준이었으며, 한국전쟁시 주일미군을 투입한 후에도 전황이 불리해지자, 미 군부에서는 일본을 재무장하여 전장에 투입하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한반도가 유사사가 되면 미국의 일본활용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다.

오키나와로 이동시키지 않고 6월에 미국으로 귀환하도록 명령했다. 지금까지 훑어본 바와 같이 ‘후방지원’에 나섰던 일본이 어떠한 보복도 받지 않았다는 것 그 자체가 연구대상이다.

또 한번은 1953년 5월, 그 해 1월에 취임한 아이젠하워 정권은 원폭투하 계획을 검토하고 국가안보회의 검토를 거친 후, 대통령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보고를 받은 대통령은 이 계획이 일본의 인구밀집지역에 대비한 방위계획도 없이 소련의 보복공격에 무방비한 채 원폭공격을 실시하려 한다면 서명을 거부했다.

아이젠하워는 이때 “상황이 허락한다면 핵공격계획도 있을 수 있으나 현 상황으로는 그것이 소련 참전의 빌미를 제공하여 정세를 불리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재삼 평가해 보면 공폭 등 강도 높은 공격을 받은 측에서는 공폭 발전기지가 되는 일본에 보복공격을 가하여 공격능력을 저하시키려 했을 것이다.

3. 한국전쟁과 일본자립의 길

(1) 남침계획을 읽고 있었다

부산의 유엔군 묘지에는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수많은 전사자의 묘비가 줄지어 있다. 유엔군으로 참전하여 목숨을 잃은 세계각국의 젊은이들이다. 유엔군 가운데 90%가 미군이었고, 영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등 서방 16개국이 전투병력을 파견했다.

1950년 6월 25일, 동경은 쾌청한 일요일을 맞이하고 있었다. 미대사관을

속소로 하고 있었던 맥아더는 GHQ당직장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같은 날 북한과의 사이에 전면적인 내전이 발생했다고 공포, 북한의 평양방송은 같은 날 아침 한국측에 대하여 정식으로 선전을 포고한다고 보도했다. 어느 쪽이 먼저 전쟁을 일으켰는지 아직 많은 논란이 있으나 한국, 미국 등 서방측에서는 일반적으로 북한의 무력침공이 발단이 되었다는 견해다.

북한측은 반대로 미국이 한국정부에 압력을 행사하여 도발했다고 주장한다. 최근에는 북한에 의한 공격선행설이 유력하다.

맥아더는 개전 직후의 경악을 회고록에 “나는 꿈을 꾸는 듯한 기묘한 기분이었다. 그럴 리가 없다면서 자신을 반문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조선전쟁-김일성과 맥아더의 음모』(하기와라료우:萩原遼著)⁶⁾에 의하면, 김일성이 은밀히 추진하던 음모가, 맥아더의 극동군이 1년 전부터 준비했던 미국의 대응모에 완전히 이용당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일본공산당 기관지인 아카하타(赤旗)의 평양특파원에서 퇴직한 후, 미국 공립공문서관에서 160만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북한관련문서를 열람하고, 그 중에서 미국은 북한이 남침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렸다는 논리를 찾아냈다. 이 책에 의하면 중국본토에서 모택동의 공산당에 장개석 군대가 대패한 후 의기소침해 있었던 미국의 군부 및 극우세력이 김일성의 공격기도를 천우의 기회로 삼아 기사회생의 반격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부터 그때까지 미국외교는 온건파들이 장악하기 시작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년도 1949년 12월, 미 국가안보회의에서는 ‘미군의 한국철수’를 결의하였고, 트루먼 대통령은 1950년 1월 5일 “대만이 중공을 공격해도 미국은 개입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발표, 이어서 1월 12일 애치슨 국무장관은 “미국의 방위선은 알류산-일본열도-오키나와-필리핀을 연하는 선으로, 이 서태평양에서 미국의 방위선이 침략을

6) 역자주: 원제목은 『朝鮮戰爭 金日成とマッカーサーの陰謀』, 文藝春秋社, 1993년.

받으면 미국은 무력으로 이를 저지한다”는 이른바 애치슨 라인을 발표했다.

이 선언은 미국이 한국과 대만을 포기했다는 인상을 세계에 알린 메시지였다. 이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한 쪽은 김일성이었다. 그는 애치슨 라인과 트루먼 연설에서 한국에 무력공격을 해도 미군이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심증을 받았을 거라는 것이 많은 연구자는 말한다.

그러나 트루먼은 즉각 군사개입을 결정, 주일해군, 공군, 이어서 육군에 출동명령을 내리고 유엔에도 개입을 요구했다. 소련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유엔 안보리에서는 북한을 ‘평화의 파괴자’로 비난하는 결의를 채택하고 유엔군 파견을 결정한 것이다. 트루먼이 180도 정책노선을 변경하여 즉각 군사개입하게 된 그 이면에는 아시아에서 급속하게 파급되기 시작한 공산주의 위기감을 공감한 맥아더와 덜레스 국무성고문 등 강경파의 음모가 있었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사실은 김일성이 이끄는 북한군의 남침은 덜레스의 의도대로 미 의회와 유엔을 반공의 합창단으로 만드는데 성공했다. 결국, 한국전쟁은 3년내에 걸쳐 한반도를 초토화시켰고 공산측(북한, 중공군) 사상자 200만명, 유엔군 측(한국, 유엔군) 전사자 153만3,000명이라는 희생자를 내고 말았다.

(2) 활기를 되찾은 일본 산업계

한국전쟁은 패전국 일본을 예상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선회시켰다. 국제 정치면에서는 일본을 ‘자유주의 진영’으로 편입시켰고, 일본에 주둔했던 미 점령군은 유엔군의 이름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하게 되었고 일본은 군수기지로 전환되어 경제에 활력을 주는 결과가 되었다. 전쟁이 확대되고 장기화될수록 일본경제는 활성화되었다.

미군의 물자와 노무수요, 이른바 ‘특수’가 개전 후 2개월만에 1억 달러를 넘었다. 한국전쟁이 있기 전 1949년의 연간 수출총액이 5억이었음을 감안하면 상당한 소득이었다. 자동차산업을 비롯한 산업계의 임금체불이 해결되

고, 세계적으로 군비가 확대되면서 수출산업은 폭발적으로 활기를 찾았다. 1949년의 무역적자가 4억 달러였는데 한국전쟁 발발년도에는 1억5,000만 달러로 감소되었다. 디플레이션으로 고민하던 재계는 황재를 만난 것이다.

실질적으로 6년간 계속된 특수는 연평균 계약고가 2억7,000만 달러로 국제수지악화가 한꺼번에 호전된 셈이다. 미군으로부터 받은 수주물자는 면포, 모포, 마대 등 섬유관계와 트럭, 철강, 유자철선, 철주, 드럼통 등 중공업제품이었다. 서비스수요는 차량, 기계수리, 건물과 기지의 건설정비, 수송, 통신이었다.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군용차량정비, 오키나와 군사기지건설은 군수산업을 부활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미군이 일본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면서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달러도 대단했다. 휴가 및 휴양제도가 시작된 1952년의 개인소비가 2억2,800만 달러에 이르렀다. 홋카이도의 지도세(千歳)기지에서는 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이 1952년에 270명이었는데 다음해는 2,500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여기에 카바레와 술집을 포함하여 '매춘경제'라는 신종단어가 나올 정도였다.

이와 같이 예상하지 않았던 특수에 의해서 일본의 산업구조가 크게 변화되고, 중화학공업중심으로 이행되었다. 그 전형적 예가 토요타다. 토요타 자동차는 1950년 봄에 파산직전의 상태였다. 도지라인⁷⁾으로 불황 속에서 자동차는 팔리지 않고, 임금체불이 계속되는 등 빈사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트럭의 대량생산으로 기적적인 재건을 하게 된 것이다. 고마즈(小松)제작소도 역무특수를 통하여 당시로서는 보기 드물었던 기계류를 수주받고 기술개발의 기회를 만들었다.

그러나 특수가 반드시 장미빛 색깔만은 아니었다. 물가가 급상승하고 임금은 공업부문에서 높지 않았으나 농업부문이 하락했다. 또한 특수분을 타

7) 역자주: 1949년 GHQ의 재정금융고문으로 조세프 도지가 부임, 전후 일본의 경제자립의 기초를 굳히기 위하여 '도지라인'이라는 재건축을 추진했다. 균형재정의 확립과 단일환율제 적용하여 인플레이션을 우선 막기는 했으나 오히려 경제는 불황으로는 함몰되었다. 여기에서 회복하는 계기가 된 것은 한국전쟁이었다. 잠재공업력이 있는 일본에 대하여 미군의 전쟁특수주문으로 기업의 생산투자활동이 촉진되었다.

고 노동이 강화되고 노동시간이 대폭적으로 연장되어 잘 되는 대기업과 그
그늘에서 허우적대는 중소기업·노동자라는 전형적 패턴이 다시 재현되는
결과가 되었다.

(3) 대일강화조약 조기체결

한국전쟁은 미일을 중심으로 검토되었던 강화조약에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대일강화조약체결을 위한 작업은 이미 1947년 초부터 시작되었다.
『昭和史-격동의 반세기6』(아사히신문사 발행)에서 패전직후 일본외무성
조약국장이었던 니시무라 쿠마오(西村熊雄)는 대일강화조약을 둘러싼 당시
의 국제정세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연합국은 강화를 서두르지 않고, 우선 패전국
을 점령·관리하여, 이들 국가를 평화애호국으로 개조한 다음, 새로운 정부
와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는 정책이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역사에서 보았
던 전쟁-강화-전쟁이라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방책이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세계는 자본주의·미국, 공산주
의·소련이라는 강대국의 대립, 동서에 의한 이해대립관계가 확대되면서 냉
전시대로 돌입하고 만다. 여기서 한국전쟁이 반발, 냉전은 순간적으로 熱戰
으로 급변하고 말았다. 미국정부에서는 일본을 계속 점령하면서 전쟁수행에
자유자재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대일강화조약을 연기해야 한다는 국방성과,
일본의 협력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제일 유리하다고 주
장하는 국무성이 대립했다. 국무성의 정책배경은 덜레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덜레스는 일본을 평화적, 친미적, 반공국가로 만든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졌던 것이다. 이 구상에 힘을 주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한국전쟁
이다.

덜레스는 한국을 방문한 후, 1950년 6월 21일 일본을 방문했다. 그 4일 후 덜레스가 일본 체재중에 전쟁이 일어났다.

「昭和史」에 의하면, 덜레스는 “북한의 남침이면에는 한국병합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일강화원칙을 깨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직감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일강화연기는 북한의 책략에 말리는 것이며, 미국으로서는 강화를 오히려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덜레스는 일본을 반공의 방파제로서 뿐만 아니라, 반공을 위한 군사기지화 하기 위하여, 강화조약을 체결한 후에도 미군을 일본에 주둔시켜 일본을 재군비해야 한다고 트루먼에게 건의했다.

트루먼은 덜레스의 건의를 수용하고, 1950년 9월 14일 대일강화조약을 즉시 추진하도록 국무성에 지시했다. 한국전쟁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탄생을 여는 첫 번째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미일안보조약이라는 ‘전후 일본의 형태’를 결정하는 미국의 의도가 이 시점에 결정되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덜레스는 그후 대일강화조약체결을 위한 미국측 대표로 임명되어 1950년 10월 대일강화3원칙을 정리했다. 소련과 중국이 배제되었기 때문에 양국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그러나 미국의 의도는 소련이 반대해도 강화조약을 추진하겠다는 ‘단독강화’였다.

(4) 재군비와 경찰예비대

1951년 1월, 덜레스는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그리고 강화조약 후에 일본의 재군비와 미군주둔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요시다 수상은 재군비하는 데는 헌법개정이 필요하고, 국민정서상 재군비를 할 수 있는 심리적 기반이 아직 부족하며, 경제력도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이미 군대의 기초가 되는 경찰예비대가 창설(1950년 8월 10일)되어 있으므로 이를 증강하여 재군비를 추진하자고 요시다는

덜레스를 설득했다. 미군주둔은 요시다가 요구한 것이라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

덜레스는 회담을 마치고 일본을 떠나면서 ‘일본국민들은 미군주둔을 압도적으로 희망한다’고 성명을 발표했고, 요시다도 이에 답하면서 ‘덜레스 특사는 일본본토 및 그 주변에 미군을 주둔시켜서 비무장상태인 일본을 방위하기 위하여, 미국과의 안보조약체결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와 국민 대부분은 마음으로부터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여기서 경찰예비대에 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이것도 한국전쟁의 혼란기에 탄생했다. 일본의 재군비는 패전직후인 1948년부터 미국의 국익에 준하여 계획되기 시작했다. 미국내에서는 강화조약체결 전에 일본의 방위는 일본이 직접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일본을 재군비하여 동아시아에서 한국, 대만을 포함하여 군사체제를 강화하려는 방향이 급속하게 구체화되었다. 이 시점에 한국전쟁이 발생했다.

미국의 대응은 신속했다. 개전 2일 후인 7월 8일, 맥아더는 일본정부에 서한을 보냈다. ‘일본이 75,000명의 국가경찰예비대를 창설하고, 해상보안청을 현재인원에 8,000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허락한다’는 지령이었다. 이미 주일미군은 한국에 파견되어, 일본국내에는 1개 사단도 안되는 병력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미군은 서둘렀다. 일본국내에서 공산세력에 의해 무장봉기라도 일어나면 후방기지로서의 일본이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는 GHQ의 초조감 때문이었다. 경찰예비대 창설을 두고, 일본정부내에서는 헌법9조에 의한 제약 때문에 먼저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여 창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GHQ는 국회심의과정에서 지연될 것을 우려하여 포츠담 政令에 근거하여 ‘경찰예비대령’을 공포한 것이다. 경찰예비대 모집에 과격적으로 많은 사람이 지원했다. 대부분 실업자로서 구군인 가운데 하사관출신자, 농촌에서는 차남이나 삼남 등이 대부분이었다. 그후 경찰예비대는 보안대, 자위대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5) 일본의 진로를 결정한 안보

1951년 2월, 요시다와 1차 미일회담을 마친 덜레스는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를 차례로 방문하고, 대일강화를 위한 설득에 나섰다. 필리핀은 일본의 배상을 강력히 주장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일본의 군사적 부활에 경계심을 표했다. 덜레스는 영국, 프랑스도 방문하면서 정력적으로 설득에 나섰다. 1951년 7월 12일, 이렇게 하여 만든 것이 미영합동의 대일강화조약 초안이다. 이 조약초안은 그 이후에 필리핀에 대한 배상문제부분만 일부 수정하여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서 조인되었다.

내용은 기본적으로 덜레스가 제시한 7개 원칙⁸⁾에 따른 것이었다. 요시다는 수락연설에서 ‘이 조약은 공정하고 역사상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관대한 것이다’고 평가하고, 영토, 배상, 귀환자 문제를 중심으로 연설했다. 이 가운데 요시다가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은 영토문제였다. 소련을 의식하여 특히 북방영토에 대해 ‘하마보이, 시코탄 제도가 소련군이 점령한 채로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종일인 9월 8일, 소련,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는 결석했으나, 일본을 포함한 49개국이 강화조약에 조인하였다.

그러나 요시다에게는 아직 큰 일이 남아있었다. 미군의 일본주둔을 결정하는 미일안보조약 조인이었다. 요시다는 그 날 오후 5시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제6군사령부에서 조약문서에 서명했다.

내용은 “일본은 무장이 해제되어 있으므로 고유의 자위권을 행사할 수

8) 역사주: 강화교섭특사인 덜레스가 일본을 방문한 시기는 1951년 1월이다. 이때는 복진한 유엔군이 중공군 개입으로 평양철수(1950년 12월 10일), 38선 철수(1951년 1월 1일), 서울철수(1951년 1월 4일) 등 어려운 전황이었다. 미국은 세계대전으로의 확대, 공산군의 일본에 대한 침략가능성 등도 예측하여 일본을 서방진영으로의 편입을 서둘렀다. 이때 강화7원칙을 발표했는데, 이 원칙은 미국의 세계대전대비책이라 할 수 있다. 요약하면 ① 일본교전했던 국가 중에서 평화의사가 있는 국가와 강화조약, ② 일본의 유엔가입 고려, ③ 영토문제, ④ 일본의 안보를 위해 안보조약체결과 미군주둔, ⑤ 정치적 및 통상 조약으로 일본에 최혜국대우를 부여, ⑥ 청구권 완화, ⑦ 청구권 분쟁은 국제사법재판소가 주관하는 특별중립재판소에서 해결 등이다.

있는 유효한 수단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전제로 시작하면서 일본측이 안보조약을 희망하는 것으로 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본국내의 대중운동이나 외부의 무력공격에 미군이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의무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진 시간대는 한국전쟁 발발후부터 강화조약 조인까지는 불과 1년 2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다. 대단한 속도로 진행되었다. 한국전쟁 발화로 동아시아에서 공산주의 위기감을 인식한 미국은 일본을 동아시아 방위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강력한 외교수단을 발휘한 것이다.

한국전쟁과 미국의 일본활용으로 폐허에 허덕이던 일본경제는 전쟁특수로 기적적으로 부활하게 되었고, 냉전구조 속에서 미국진영에 편입되면서 오키나와, 오가사와라는 일본본토에서 분리되어 미군기지로 활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공산주의 도미노를 우려한 미국은 그 후에도 인도지나 반도 전쟁개입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4. 소해대 활동

(1) 은닉된 임무

유엔군은 북한이 소련의 지원을 받아 각 항만에 매설한 기뢰⁹⁾를 제거해야 했다. 한반도 동서해안 상륙과 반격작전을 위한 군수지원을 위해서도 기뢰제거는 시급했다. 미해군 기뢰정은 대부분 미본토로 철수했고, 극동에는 6척의 소해정 밖에 없었다. 그리고 기뢰전을 경험한 병력도 부족했다.

9) 역자주: 소련은 평양과 원산에 機雷戰학교를 개설하여 북한에 대한 기뢰교육을 실시, 특히 원산에는 1950년 8월 1일부터 약 3개월에 걸쳐, 약 3,000개의 繫維 및 磁氣機雷을 설치했다.

이때 일본에는 제2차 세계대전시 설치한 기뢰를 제거하고 있었던 78척의 소해정과 1,500명의 소해대원이 있었고, 그 기량과 경험은 높이 평가받고 있었다.

원산항에 많은 기뢰가 매설되었다는 것을 인지한 미해군은 일본소해대를 활용하기로 판단하고 해상보안청장 오오쿠보 야스오(大久保武雄)에게 소해대를 한반도에 출동할 것을 요구했다. 이때가 1950년 10월 2일이다. 오오쿠보의 보고를 받은 요시다(吉田)총리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면 델레스 특사와의 강화조약을 교섭하는데 악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하여 파견에 응했다.¹⁰⁾

요시다 총리의 결단으로 일본각지에서 활동중인 소해정을 시모노세키(下關)에 집결, 항로계발본부장 다무라 큐조(田村久三)를 지휘관으로 임명하여 특별소해대를 편성했다. 그러나 소해대원들은 어떤 임무로 집합했는지 모르고 있었다.

시모노세키에 집합한 소해대원들에게 미 제7함대사령관의 지휘를 받으며, 선박명 및 번호 등은 제거, 일장기 대신에 국제신호E기를 게양하도록 지시하고, 기뢰정보에 대해서 설명하자 소해대원들 사이에는 한국전쟁에 참가시키는 것이 아니냐며 불안이 확산되었다. 그리고 “미 해군지휘하에 활동한다는 것은 한국전쟁 참가가 아닌가, 이것은 헌법위반이 아닌가” 등의 질문이 쏟아졌다.

10) 역자주: 이글의 내용을 그대로 해석하면 미국의 요구에 마지못해 수동·강제에 의해 출동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1978년 NHK에서 특집방송 「일본특별소해대」을 편집하기 위해 한국전쟁당시 미극동해군 참모부장 어레이 버그(당시 소장, 예비역 대장)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정부가 자주적으로 협력했고, 소해대원들의 참여부도 자유의사에 맡겼다”는 증언을 종합하면, 당시 일본의 국내정세 즉, 산업폐허, 치안문란, 공산세력에 의한 혁명분위기, 전면강화파와 단독강화파의 극심한 국론분열, 재무장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으로 고민한 요시다 정권이 국내여론의 환기와 경제공황을 타개하기 위해 출동해야 했으나 미국이 제의하는 형식으로 추진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투입된 소해대원의 심경

당시 일본 국내에서는 전쟁에 대한 혐오와 염증, 일본이 전쟁을 했기 때문에 패전 후에도 고통에 허덕이고 있다는 풍조가 만연해 있었다.

투입된 소해대원들로서는 평화헌법이 제정되고, 국내는 평화분위기로 이행되고 있을 때, 군인도 아닌 단지 운수성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전쟁에 출동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다.

어떤 선장은 “전쟁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 위험이 높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부하를 데리고 갈 수 없다”면서 배에서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과거의 해군지휘관들은 자기의견이 타당해도 전체의 사기를 위해 자기를 수그리고, 선배가 말하면 거부하지 않는 해군의 연대정신”을 살려 출동했다고 한다.

한편, 전쟁에 출동한다는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배에서 내려 출동하지 말라고 눈물로 호소하며, 전쟁이 끝났는데 왜 다시 외국의 전쟁에 참가하느냐며 만류했다.

또한 많은 대원들은 “평화헌법에서 전쟁을 포기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타국의 전쟁에 생명을 걸고 출동할 이유가 없다. 게다가 우리는 군인이 아니라 국가공무원이다. 일본재건을 위하여 국내에서 소해작업을 해왔다. 외국의 소해를 위해 전쟁에 투입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나 미 점령군의 명령이라면 일본정부로서는 따르지 않을 수 없지 않는가”라는 것이 출동전의 심경이었다고 한다.

(3) 소해작업 실상

제2소해대의 지휘관으로 임명된 고베(神戸) 향로계발 본부장인 노세 쇼고(能勢省吾)는 소해정 4척과 순시선 3척을 인솔하여 10월 8일 오전 4시, 다무라(田村) 총지휘관이 승선한 지휘함 ‘유우찌도리 호에 후속하여 출항,

쓰시마 해협에서 미해군으로부터 작전계획을 받았는데, 그것은 “목적지는 원산, 모든 선박은 무선사용금지, 일몰후 등화관계 철저히, 미군함을 따르라”는 것이다.

소해대는 10월 10일 아침, 원산항에 도착하여 소해작업을 개시했다. 그러나 10월 12일 원산항내에 도착하여 소해작업을 개시했다. 그러나 10월 12일 원산항내에 진입하자마자 한국해군 소해정 2척이 기뢰 접촉사고로 침몰하여 사망 12명, 부상 92명(후에 1명 사망)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소해작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으나, 상륙작전 일자가 임박하여 14일부터 작업이 재개되었다. 그러나 17일에는 원산항내에 진입한 특무소해정 MS14호가 기뢰에 접촉, 침몰하여 나카다니 사카다로(中谷坂太郎) 대원이 사망, 2명이 중태, 5명이 중상, 11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 사태의 여파로 인하여 선장들은 “전쟁에 더 이상 말려들지 말자, 소해를 중지하고 복귀해야 한다. 시모노세키에서 설명한 것과는 다르다”며 소해작업을 중지할 것을 주장했다.

소해대원간에 논쟁이 있는 후, 노세(能勢)는 소형 소해정으로 소해작업을 할 수 있도록 미 해군지휘관에게 건의했다. 그러나 미 해군지휘관 스미스 소장은 “소형 소해정으로 실시할 여유가 없다. 지금까지 실시한대로 소해를 계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일본에 복귀하라. 15분내 출동하지 않으면 포격한다(이것은 고용해제=Hire를, 포격=Fire로 잘못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력하게 대응을 했다. 노세(能勢)는 각 대원들을 설득했다. 그러나 선장들의 결의는 강력했는데, 그 중에서 한명이 따르지 않고 일본으로 복귀했다. 그리고 미군의 강한 비난을 받고 노세(能勢) 이하 각 선장들은 퇴직했다.

그후 파견된 부대는 유엔군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을 소해하였고, 1척이 좌초 침몰한 것 외는 큰 사고는 없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해정은 선체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급조한 목조선이고, 엔진은 전후에 계속되었던 소해작업으로 노후화되어 정비가 곤란했다. 또한 소해작업 현장은 겨울이며 악천후 기상으로 보급지원이 충분하지 않았다.

이 소해작업에 참가한 대원들은 “야간에 어느 노인이 배를 타고 찾아와서, 북한군이 식량을 전부 빼앗아 가버려, 애들이 먹을 죽도 없다”는 등, “주간에는 전쟁, 야간에는 난민구제, 이런 상황은 출항 전에는 상상도 못했다”고 회고하고 있다.

또한 해주에 파견된 제1소해대 지휘관 야마우에(山上龜三雄)는 “일본패전 이후 5년간 빈약한 기술과 시설, 동계 악천후 때문에 북한해역에서의 해상 활동은 불을 보듯 뻔했다”고 회고했다.

(4) 소해대 파견 성과

특별소해대는 소해대와 시항선으로 구분, 1950년 10월 중순부터 12월초까지 원산, 군산, 인천, 해주, 진남포 등에서 활동하였고, 시항선인 쇼에이마루(桑榮丸)는 1951년 4월 6일부터 1952년 6월 30일까지 인천, 목포, 여수, 마산, 부산, 진해를 대상으로 안전확인을 위한 확인 항해를 계속했다.¹¹⁾

특별소해대는 연 7개대, 소해정 44척, 순시선 10척을 파견, 해로 327km와 정박지 600km를 소해, 27개의 기뢰를 처리했다. 이 활동을 하면서 1척 침몰, 1척 좌초, 1명 사망, 18명의 부상이 발생했다.

오오쿠보 장관은 임무를 마치고 귀국한 대원들에게 “일본이 장차 국제사회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얻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의 노력과 땀이 필요하다. 금번 여러분들은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위대한 업적을 쌓았으며, 국제적 신뢰는 물론이고 일본의 진로를 제시했다. 금번 활동은 신생일본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고 격려했다.

11) 역사주: 일본특별소해대는 '95-66부대'라는 부대명칭을 가지고 미군지휘하에서 활동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미해군 한국전사'에는 계약(contract) 일본소해정으로 표현, 일본정부의 요구로 소해활동 대가로 연료, 보급,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2억3,698만1,294엔을 받았다. 일본이 주권을 회복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일자인 1951년 9월 8일을 기준으로 보면, 주권회복 후에도 소해활동을 실시한 사실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소해활동은 해군작전의 일환이다.

미 극동해군사령관 죠이 중장도 ‘미군의 요구에 신속하게 집결, 출동준비를 완료, 대비태세를 갖춰 주어서 대단히 고맙다. 악천후에 의한 장애, 유엔군 협력에 따른 언어소통문제, 보급, 수리 등 어려움이 많았으나 여러분의 인내와 노력, 다무라(田村) 항로계발부장의 적절한 지도로 이들 어려움을 모두 극복했다. 이와 같은 나의 더 없는 기쁨을 오오쿠보 장관을 통하여 찬사를 전하고 싶다. 잘 전해주기 바란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 찬사는 단순한 외교치레가 아니었던 것은 그 당시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이 제출한 ‘한국전쟁에 관한 중간평가 보고서(극비문서)’를 보아도 이해할 수 있다. ‘일본소해정은 신뢰할만 했다. 작업과정에서 언어문제가 있었으나 기후와 후방지원의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係維 및 磁氣기뢰를 소해했다. 인력은 우수(good)했으며, 낮은 마력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작업도 양호(satisfactory)했다.’(보고서 제3호)

‘일본의 3식소해구는 기능이 좋았다. 레이더가 없어 정확한 항법이 곤란했으나, 日本製 3식소해구는 유효폭이 적었지만 미국의 B8 소해구와 버금갈 정도였다.’(보고서 제2호)

요시다 수상은 오오쿠보 장관을 통하여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소해대원들에게 노고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여러분의 활동은 국제사회에 참가하려는 일본의 방향에 빛을 안겨주었다’고 위로했다. 이 소해대 결과 때문이었던지 대일강화 초안은 외무성 등에서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유리하게 작용했다 한다. 소해대를 파견하여 강화조약을 유리하게 진행하려는 요시다 수상의 의도가 성공했다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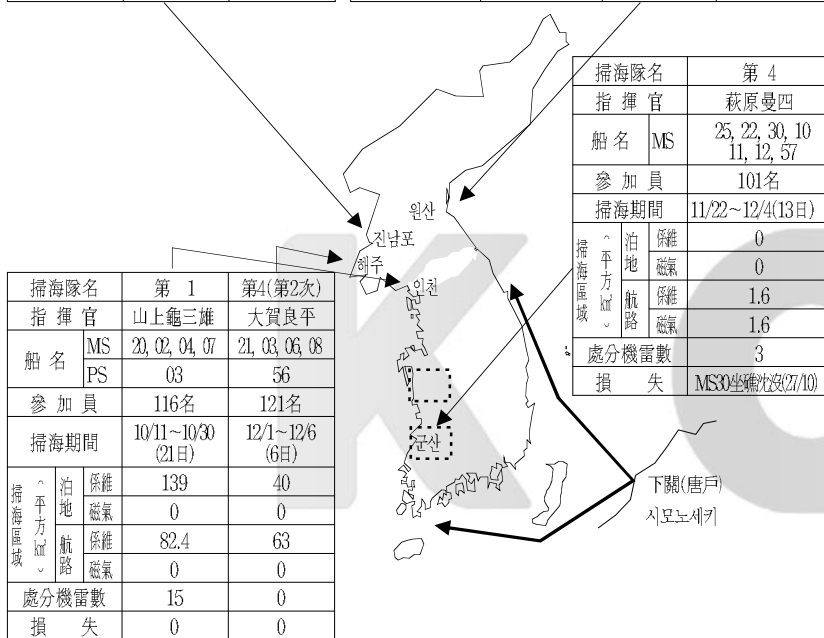
(5) 파견후 여파

당시 상황이 미군 점령기간이었지만, 소해대 파견은 헌법위반과 정치 문제가 수반되어, 요시다 수상은 소해대 파견을 일체 비밀로 하라고 지시했다.

<표 2> 특별소해대 편성과 결과

特別掃海隊(95-66部隊) 總指揮官 田村久三

掃海隊名		第2(第2次)	泰昭丸	掃海隊名	第 2	第 3	第1(第2次)			
指揮官		石野自疆	星子直明	指揮官		能勢省吾	石飛缸	花田賢司		
船名	MS	62, 26, 22, 57, 09, 13, 15, 10, 21, 30, 06, 08	泰昭丸	船名	MS	62, 03, 06, 14, 17	24, 19, 01, 05, 16	24, 19, 02, 04, 05, 07		
	PS	56			02, 04, 08	02, 04, 08	48			
參加員		348名	58名	參加員		207名	152名	101名		
掃海期間		11/7~12/3 (23日)	11/14~11/30 (13日)	掃海期間		10/10~10/18 (9日)	10/20~11/26 (38日)	11/22~12/4 (13日)		
掃海區域 (平方km)	泊地	係維	36	0	掃海區域 (平方km)	泊地	係維	0	67.35	0
		磁氣	0	0			磁氣	0	24.0	0
	航路	係維	90.1	79		航路	係維	2.4	2.75	25.2
		磁氣					1.5	36.4	0	
處分機雷數		2	0	處分機雷數		3	5	0		
損失		0	0	損失		MS14 觸雷衝突(7/19)	0	0		



掃海隊名		第 1	第4(第2次)	
指揮官		山上龜三雄	大賀良平	
船名	MS	20, 02, 04, 07	21, 03, 06, 08	
	PS	03	56	
參加員		116名	121名	
掃海期間		10/11~10/30 (21日)	12/1~12/6 (6日)	
掃海區域 (平方km)	泊地	係維	139	40
		磁氣	0	0
	航路	係維	82.4	63
		磁氣	0	0
處分機雷數		15	0	
損失		0	0	

掃海隊名		第 4	
指揮官		萩原曼四	
船名	MS	25, 22, 30, 10, 11, 12, 57	
	PS		
參加員		101名	
掃海期間		11/22~12/4(13日)	
掃海區域 (平方km)	泊地	係維	0
		磁氣	0
	航路	係維	1.6
		磁氣	1.6
處分機雷數		3	
損失		MS30 觸雷衝突(27/10)	

그러나 파견이 있는 후 4년이 지난 1954년 1월 19일 신문에, 해상보안청 소속의 소해정이 한국에 파견, 1척이 침몰, 1명이 사망했다는 내용이 기사화되자, 1월 30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한국전쟁 상륙작전에 해상경비대 경비정이 참가, 1척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정부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가”라는 어떤 의원의 질문에, 요시다는 “소해정이 침몰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기억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3월 24일 외무위원회에서는 산케이(産經)신문에 보도된 ‘원산 상륙작전에 참가—해상보안청 소해정’ 기사를 인용하여, “전사자의 묘가 시코쿠(四國)에 위치한 콘비라구(金毘羅宮)에 있으며, 기념비에 요시다 수상외의 휘호가 적혀있는 사실까지 확인하고 있다”고 추궁하였고, 또한 “敵前上陸에 까지 참가시키면서 유족의 입을 정부가 막았고, 원산 상륙작전에 참가하여 형제가 전사했다는 증언자가 나올 경우에 정부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사실은닉을 규탄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오키자키(岡崎) 외무장관은 소해대원들에게 훈시했던 “국제사회로의 등장과 명예로운 지위를 얻기 위해 했다”는 답변은 하지 않고, “敵前上陸은 없었다”고 답변하자, 재차 추궁이 되면서 “미군 점령기간이 아니었다면 확실히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평화조약 제19조에서 전쟁기간중 및 전쟁후에 연합국측의 지령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은 일본측에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국제법 위반이었다는 등 문제를 제기할 권리가 일본에는 없다”고 답변했다.

신문에서도 이 문제를 크게 취급하였다. 그러나 순직한 유족도 부상자 18명도 또한 참가인원 연 1,200명도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요시다 내각의 브레인가운데 한사람인 시라스 지로우(白州次郎)는 오오쿠보 장관에게 이 말을 듣고 “지금쯤이면 당연히 재판이나 위자료 문제가 거론될 상황인데, 침몰을 유지했던 해군이 전후에도 마찬가지로 침묵으로 일관하는구나”하면서 해군정신을 높이 평가했다고 한다.

원산에서 조기철수하여 해상보안청을 퇴직한 노세(能勢)는 “파견자들에게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야 하고, 목적달성을 위하여 신분을 명확히 하는 등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소견서를 제출했다. 원산에서 순직한 나카타니 사카다료(中谷坂太郎)은 국가가 공적을 인정하여, 勳章8等白色 冬栢章을 죽은 후 30년이 지난 1979년 가을에 수여했다.

(6) 소해부대의 현재

해상보안청이 발족되자 ‘제인스 해군연감’에서는 “일본해군은 잿더미에서 불사조처럼 일어서고 있다. 현재 규모는 5톤으로 제한, 1척의 배수량도 1,500톤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것이 신 해군의 中核이 될 것”으로 평가했는데, 그것이 사실이 되었다.

1952년 4월 26일에는 해상보안청법을 일부 개정하여 해상자위대의 전신인 해상경비대가 해상보안청의 外局으로 탄생하면서 소해대가 일본해군 부활의 이음새 역할을 했다.

일본 특별소해대에 참가한 간부 91명, 부사관 1,324명, 출동 소해정 76척이 해상경비대로 이적되었다.

1954년 10월 1일에는 한국전쟁에 출동했던 소해정 6척과 시항선을 가지고 제1소해군을 구레(呉)에 창설하여 패전후 계속 실시해 왔던 소해기술과 전통을 이어갔다. 그리고 1991년 4월 26일에는 이 한반도 파견 특별소해대의 전통을 이어받아 걸프지역에 소해부대를 파견했다.¹²⁾

12) 역자주: 일본은 걸프전 전비로 130억 달러를 지원하고도 서방참전국으로부터 ‘수표외교’만 하고 ‘인적공헌’이 없다는 비난을 받자, 정전이후 일본은 소해함 6척과 자위대원 510명을 출동시켜 이라크가 매설한 1,200개의 기뢰를 처리했다. 이러한 국내·외 분위기에 자위대의 역할론을 결부시켜 1992년에 ‘PKO협력법’을 제정하였다. 일본은 걸프전의 소해 활동을 전후 공식적인 첫 번째 군사분야의 국제공헌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공헌의 기원을 한국전쟁 당시의 소해대 활동에서 찾는 듯하다. 미일간의 신가이드라인에서 주변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간의 작전협력 항목으로 ‘기뢰제거, 기뢰정보의 교환’이 규정되어 있다. 현재 미국은 극동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소해정은 3척에 불과하나 일

K C I

본해상자위대는 소해모함 3척과 소형소해정 34척을 보유하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에 소해능력이 부족할 경우에 1950년과 같이 한반도 영해까지 미국은 일본에게 소해활동을 요구할 지 모른다.

5. 소련의 ‘팽창’과 미국의 ‘붕쇄’

(1)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병력감축

1945년 5월 독일의 항복에 이어 8월에 일본이 항복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은 끝났다. 미국은 유럽에서 독일과, 아시아에서 일본과 전쟁하면서 위로는 합동참모회의에서 아래로는 전선에 투입한 병력까지 합하여 1,212만 명이 투입되었다. 장기간에 걸친 전투에서 병력들은 전쟁이 끝나면서 조속히 사회 복귀를 기대했다.

그러나 1,200만이 넘는 병력이 사용했던 무기 및 탄약·장비를 비롯하여 패전국의 무장해제에 따른 무기 및 탄약·장비처리 등 많은 임무가 산적해 있었다. 아울러 일본과 독일에 대한 점령임무가 있어 이들 병력을 복원시키면 다시 징병해야만 했다.

그래서 1946년 6월까지 약 900만명을 복원시켜 1년 동안 300만명으로 감축하였고, 1948년 6월에는 육군 55만, 해군 42만, 해병대 8만, 공군 39만 등 계 144만명으로 감축하여 전쟁말의 1,212만명에서 88%을 감축하여 전후 최소 병력을 유지했다. 그래도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 전의 1940년 병력수준인 육군 27만, 해군 16만, 해병대 2만8천명 등 계 45만8천명 수준까지는 떨어지지 않았다.

전쟁 때문에 무기와 탄약을 생산했고 승리를 위해 고액의 세금을 지불하면서 제한된 생활을 했던 미국인들은 전쟁과 함께 전쟁이전의 생활로 돌아가리라는 것도 착각이었고, 또한 전쟁에 동원되어 군수장비를 생산했던 기업들도 민수산업으로 전환할 수 없었다.

트루먼 대통령은 1946년의 국가예산을 전년도 981억 달러의 2/3 수준인 604억 달러로, 국방예산을 812억 달러에서 431억 달러로 삭감했다. 그래도

국방예산을 국가예산의 71.4%을 차지했다.

1948년은 국가예산을 330억 달러까지 삭감하고, 그 중에서 국방예산은 35.6%인 118억 달러로 하향 편성했다.

미국은 이러하여 전시에서 평시로 전환하는데 약 3년이 걸렸는데, 그 사이에 국제정세는 미국이 예상치 않았던 방향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것이다.

(2) 베를린 봉쇄와 소련의 위협

영국의 처칠 수상은 1946년 3년, 연합국의 일원으로 같이 싸웠던 소련이 철의 장막을 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연설에 미국은 크게 관심을 갖지는 않았다.

그러나 동유럽이 차례로 인민공화국이 되고 소련은 1947년 7월에 코민포름을 결성했다. 이것은 공산권의 결속이었다. 유럽에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국가들이 독립을 투쟁을 하자 소련은 이들 국가를 배후에서 지원했다.

소련이 미국과 대립하게 된 것은 1948년 4월 시작된 베를린 봉쇄였다. 미·영·불·소 4개국이 분할점령하고 있었던 베를린을 소련이 봉쇄한 것이다.

미·영·불 3국은 베를린에 공수함으로써 대항하였고, 식량, 연료 등 생필품 일체를 수송기로 공수하여 베를린에서 철수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로 맞섰다. 소련이 베를린 봉쇄를 해제했던 1949년 5월까지 1년간 미·영·불 3국이 담당했던 지역은 공수를 통해서 유지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한 미국은 1948년 7월 12일 국방장관의 요구로 평시에 유지해야 할 미국 병력수준을 검토(NSC-20)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예산삭감에 중점을 두었지 평시에 미군을 유지할 목표는 명시하지 않았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최종적으로 1948년 11월 23일, 대통령에 NSC20-4를 권고하고 다음날 트루먼 대통령은 이를 승인했다.

“소련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정치·경제 및 심리전은 미국의 상대적 지

위를 악화시켜 전통적인 세계질서를 전쟁이외 수단으로 파괴하고 있다”면서, 소련을 적으로 선언하고 제3차 세계대전이 발생할 경우의 전쟁목표 및 전후처리 문제까지 검토과정인 NSC20-1에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미군사력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현상유지를 권고하여 약 17만명을 증원하는데 그쳤다.

1949년 8월에 소련이 핵실험을 성공, 미국이 이 사실을 확인하면서 트루먼 대통령은 이를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9월에는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다. 같은 해 10에는 중공이 공산혁명에 성공했다. 이미 4월에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가 체결되어 있어, 유럽지역은 소련의 팽창에 대응할 수 있었으나 중공혁명으로 극동지역은 정세가 긴박한 상황이 되었다.

미국은 같은 해 12월 31일 극동정책 NSC48-2를 결정하고, 1950년 1월 12일에 애치슨 국무장관은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그 일부를 발표했다. 미국의 극동지역의 방위선은 ‘알류산-일본-류큐-필리핀’을 잇는 선이라고 발표했다.

한국은 이 방위선에서 제외되었고, 1949년 3월 22일 결정한 대한반도 정책에서 “미국은 1949년 6월 30일까지 한국에서 철수, 북한의 침략이 있을 경우에 유엔이 대응하고 미국은 유엔군 일원으로 한국을 지원한다”고 했다.

이와 같은 정세에서 침략이 있을 경우의 위험성에 대하여 의문을 가졌던 미국무성 정책기획부는 1950년 4월 14일에 69쪽에 이르는 미국국가안전 보장회의 기본정책 수정안인 NSC68를 제안했다.

“이 정책은 이상적이지만 막대한 국가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후에 검토한다”는 결론이었다. 베를린 공수에 성공, 소련의 핵실험 성공, 중공혁명 성공, 1950년 2월 중·소 우호동맹조약 체결로 이어지는 세계정세에서도 아직 미국에까지 직접 전쟁의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한 것이다.

(3) 5년만에 국방예산이 4배로 증액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엔군 일원으로 한국지원에 나섰다. 주일미군 4개 사단 전부를 투입했다. 그러나 부산 교두보까지 후퇴한 유엔군을 지원하기 위하여 8월중에 다시 미국 본토의 2개 사단을 투입했다. 이때 미군 총병력은 육군 59만3,000명, 해군 38만1,000명, 해병대 7만4,000명, 공군 41만1,000명 등 계 146만명이었다.

맥아더의 인천상륙작전으로 유엔군은 겨우 위기를 모면했다. 한반도라는 그렇게 크지 않는 지역전쟁에서 미국이 고전했는데 만약 소련과의 전쟁이 되면 어떨까하는 차원에서 미국은 안보정책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50년 9월 21일 NSC68-1, 9월 30일 NSC68-2, 12월 8일 NSC-3를 계속 발표하여 세부검토에 들어갔고 12월 14일 NSC68-4를 정식으로 채택, 트루먼 대통령은 국민에게 국가비상사태 및 공산권에 대한 수출금지를 선언했다.

이것은 한국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세계정책, 대소정책의 대전환이었으며 미국의 군비 대증강계획의 출발점이었다. 지금까지 거론되었던 '봉쇄전략'은 견해였을 뿐이지 실제로 적용할 능력을 미국은 갖추지 못했다. 그러나 이것은 '봉쇄전략' 수행에 필요한 군사력 작성계획에 입각하여 군사력 증강을 결정한 정책이었다.

1948년 국가예산이 330억 달러, 국방예산이 118억 달러였는데 불과 5년 만에 국가예산은 2.3배, 국방예산은 4.3배로 대폭 증액된 것이다. 국가예산이 증가된 것은 대부분이 국방예산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육·해·공 3군의 병력도 1948년에 144만명이었는데 1952년에는 약 2.5배인 363만명으로 증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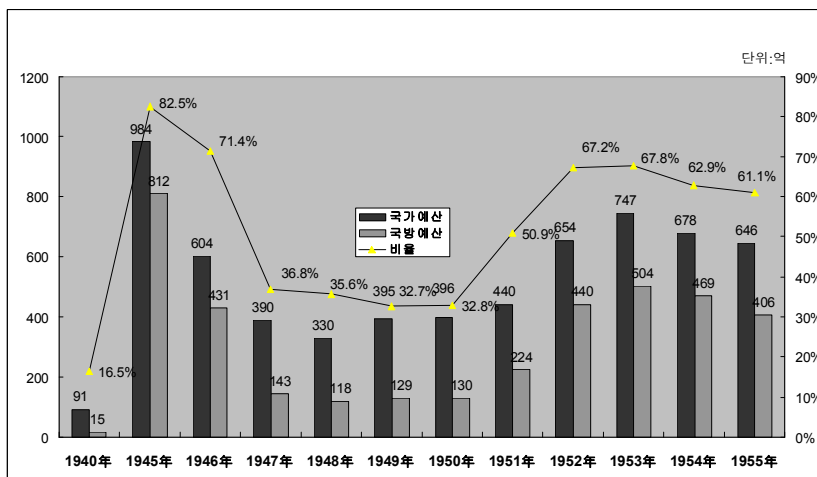
(4) 소련 핵실험 성공과 핵무기 개발경쟁

국방예산과 군사력 추이는 다음의 표에서 같으나, 이외에도 핵무기 성능 개선과 열핵무기, 즉 수소폭탄 개발이 시작되었다. 열핵무기 개발은 군과 과학자들 사이에 인도적 문제로 대립되고, 군과 예산국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했기 때문에 유효성과 경제성을 두고 대립되었다. 그러나 1949년 8월 소련의 핵실험 성공으로 미국의 핵독점은 깨졌다. 따라서 열핵무기 분야에서도 소련에 뒤질 가능성도 고려하여 미정부내에서 의견이 다시 대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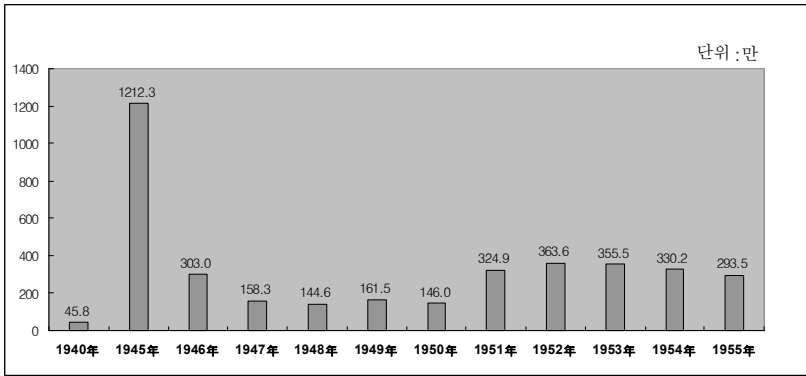
이에 대하여 1950년 1월 트루먼 대통령은 결론을 내렸다. 트루먼 대통령은 1950년 1월 31일 원자력 에너지 위원회에 열핵무기(수소 폭탄)의 기술적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열핵무기 개발의 문제점은 첫째, 시험에 필요한 트리튬 및 핵물질 원료 확보였으며, 둘째, 제조시설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우라늄 및 플루토늄

<표 3> 미국의 국가예산과 국방예산 추이



<표 4> 미 육·해·공군 병력 추이



<표 5> 미·소 핵무기 체제 개발경쟁¹³⁾

미 국	년 도	소 련
원자폭탄	1945	원자폭탄
장거리폭격탄	1948	
	1949	
수소폭탄	1952	장거리폭격탄 ICBM,인공위성
	1955	
ICBM,인공위성	1957	
SLBM	1958	
	1960	
MIRV	1968	SLBM,ABM
	1970	
ABM	1971	수중발사 순항미사일
	1972	
	1975	
수중발사 순항미사일	1982	MIRV
중성자 폭탄	1983	
	1985	
	1987	

13) 역자주: 년도는 양국의 개발년도임, 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대륙간 탄도미사일), 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MIRV: Multiple Independently target Reentry Vehicle(다탄두미사일), ABM: Anti-Ballistic Missile(탄두요격미사일)

을 계획대로 생산하면서 연구용 트리티움을 생산하는데 2억5,000만 달러의 생산시설을 건설해야 했다.

트루먼 대통령은 1950년 4월 10일 이를 승인하고 열핵무기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이 시작됐다. 합동참모회의는 1950년 10월 2일에 소련의 핵 실험 성공에 따라 1949년에는 대통령에게 건의했던 소요량의 2배의 핵무기가 필요하다 수정했다.

따라서 시설건설에 14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1951년 봄까지 우라늄 및 플루토늄의 생산량을 증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서 연구개발 및 군사적인 소요량 증가를 계획하고 최종적으로 열핵무기 개발 및 전술핵무기 생산에 필요한 시설건설에 49억 달러, 연간 운영경비로는 7억 달러가 소요된다는 보고를 원자력 에너지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했다.

1948년 국방예산은 118억 달러이었는데 1951년 핵생산시설 건설에만 49억 달러가 필요하다는 계획이었다. 시대가 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트루먼 대통령은 1952년 1월 16일 이 계획을 승인했다. 이 결과 미국은 같은 해 10월 31일 태평양에 위치한 옐게러프섬에서 세계 최초로 수소 핵폭탄 실험에 성공했다. 그때까지의 핵무기는 20KT 정도의 폭발 규모였는데 이 실험으로 500배 이상의 위력, 1만 400KT, 즉 10MT 폭발을 계측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953년 1월 20일 취임하여 트루먼 정책을 계승한다고 했으나 병력수를 증가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국방정책을 재검토한 아이젠하워 정부는 5월 의회에서 윌슨 국방장관이 ‘뉴룩(Newlook)’ 정책이라는 단어를 사용, 합동참모회의 의장인 래드포드 해군대장은 내쇼날 프레스 클럽에서 뉴룩정책은 “국방예산의 전반적인 삭감, 장기예측을 기초로 계획, 공군력 중시, 강력한 대륙방위능력, 병력삭감 및 강력한 무기사용이 그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병력수를 확대하여 군사력을 증강하는 수단에서 벗어나 공군 및 강력한 핵무기 사용에 의한 군사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으로 전환한 것이다. 덜레스 국무장관은 1954년 1월 14일 뉴룩 외교관계위원회에서 “침략을 억지하는

수단은 자유세계가 각국 스스로의 의지로 스스로 선택한 수단으로 반응하고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이며, 부담가능한 經費범위내에서 최대한의 억지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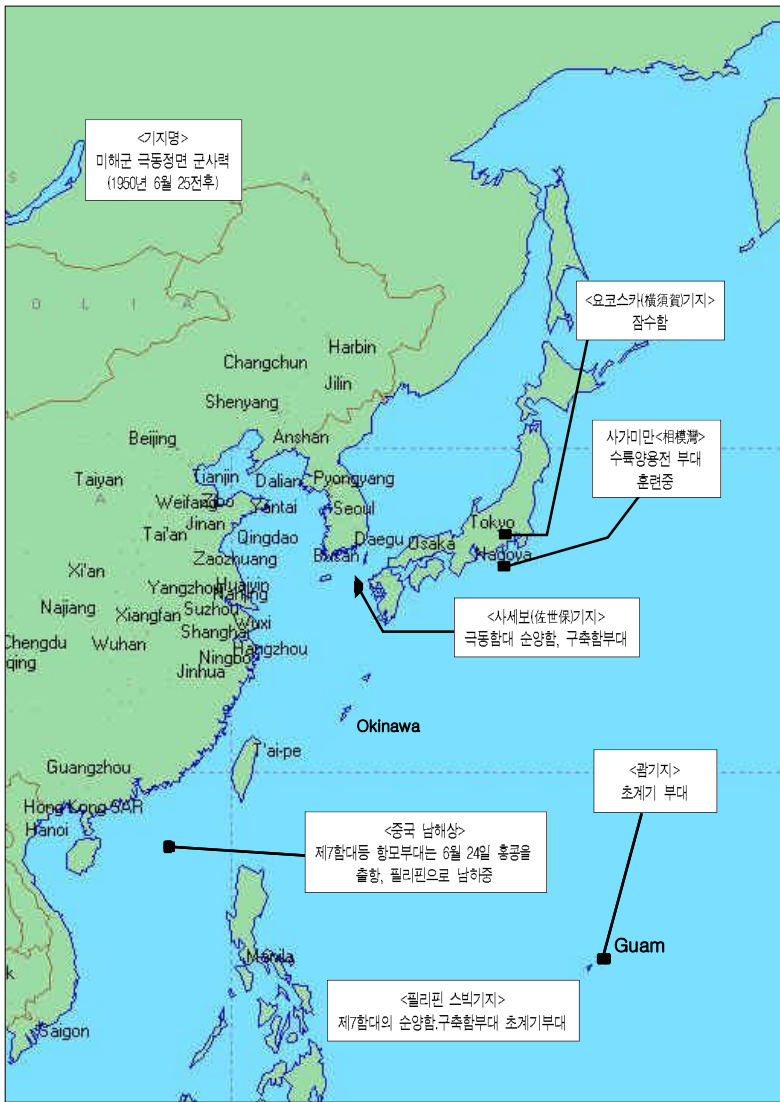
(5) 조약체결로 공산권을 봉쇄

공산권은 하나로 뭉쳐 확대되고 있었는데 반하여 자유 세계는 NATO를 제외하고는 각각이었다. 미국은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었지만 미국만으로는 자유세계를 방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자유세계국가가 하나로 단결하여 공산세력의 확대에 대응하지 않으면 저항력이 없는 국가는 공산세력 침략의 대상이 되고 말 것이라고 생각했다. 미국이 아무리 막대한 군사력을 유지한다해도 미국만으로는 공산세력을 봉쇄한다는 것이 불가능했다.

1948년 4월에 보고타(Bogota: 콜롬비아의 수도) 조약으로 미주기구(OAS)를 먼저 결성하고 유럽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를 체결했으나 유럽지역 외는 각국간에 집단안보조약에도 가맹하지 않았다. 미국은 한국전쟁의 영향으로 NSC68-4를 채택하고 미국의 군사력 증강을 결정함과 동시에 자유 세계국가와의 안보조약을 체결하여 비록 혼자만 아니라 자유세계국가와 협력하여 공산주의 세력을 봉쇄한다는 계획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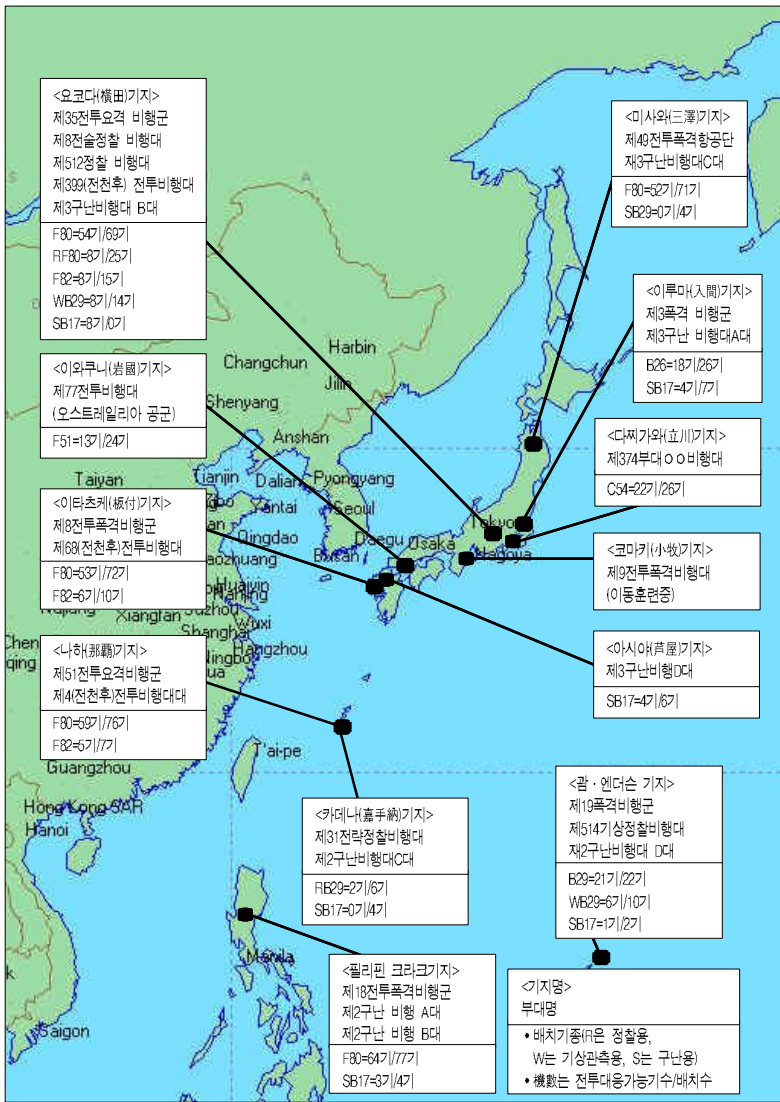
1951년 8월 미국은 필리핀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 같은 해 9월 태평양 안전보장조약(ANZUS: 호주, 뉴질랜드)을 체결, 미일 상호안전보장조약 체결, 1953년 7월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1954년 9월 동남아 집단안보조약(SEATO)체결, 같은 해 12월 중국 국민당정부와 상호방위조약 체결 등과 같이 2국간 또는 다국간 상호방위조약 또는 상호안전보장조약을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에서 체결하였다.

이와 같은 조약은 크게 구분하여 NATO, 한·미, 미·일, 미·필과 같이 미군을 조약국에 파견하는 조약과, 조약을 맺고 있으나 미군을 현지에 파견하지 않는 조약이 있다. 이것 모두 공산주의 팽창정책을 봉쇄하기 위하



<도 2> 극동군 미해군 기지(한국전쟁 개전후)14)

14) 역사주: 한국전쟁 開戰前後的 극동에서의 미해군의 소재를 침부하였다.



<도 3> 극동 미공군 배치 및 위치(한국전쟁개전시)¹⁵⁾

15) 역사주: 한국전쟁 開戰時 極東에서의 미공군의 배치와 위치를 첨부하였다.

여 자유주의 국가가 미국을 중심으로 대동 단결하는 동맹조약이다.

이러한 국제사회는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구분이 명확해졌고 양진영간에 대립은 격화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중동은 별개였다. 아랍과 이스라엘이 대립하고 미국은 양자사이에 납득할 수 있을만한 상황을 창출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미국은 소련이 위성국을 이용한 세력권 확대, 즉 한국전쟁에 의해 '봉쇄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군사력을 확대하기로 방침을 전환하게 된 것이다.

자유세계의 단결로 공산권에 대항하기 위하여 미국은 집단안보조약의 범위를 확대하게 되었고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대립구조가 명확해짐에 따라 대립은 격화되었던 것이다.

아울러 군사력 확대는 열핵무기라는 새로운 수단이 등장함으로써 질적인 큰 변화가 시작되었고 미국은 그 이후 국방예산이 국가예산의 약 60%를 차지하는 시대로 돌입하게 되었다. 또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우주개발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